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16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2월 27일 (음력 11월 10일) 수요일

Photo 漫評

악행의 말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북한과 종북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공직자의 사명"이라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실장은 "종북 세력의 위험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후회도 내비쳤다.

최후진술을 이어가던 김 전 실장은 '여든을 바라보는 고령의 환자인 제게 남은 소망은 늙은 아내와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으로 4년간 병석에 누워 있는 쉰세 살 된 아들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며 잠시 울먹였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도 "재직 당시로 돌아가 정무수석실이 관여한 그 순간을 바로잡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글=조인호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

김기춘

노회찬

세월호 가족

'파행 vs 봉합' 광주시-자치구 인사교류 기로

광주시, 늦어도 이번주 안으로 인사예고

5개 자치구 중 3곳 협약 이행에 무게 둬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간의 인사교류 갈등이 파행으로 치달을지 아니면 극적으로 봉합될 지 기로에 놓였다.

광주시가 "최악의 경우 인사 교류 중단"까지 공언했으나 일부 자치구는 부단체장 자체 승진과 4급 서기관 시(市) 전입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6일 시청 5층 지방기자실에서 차담회를 갖고 "자치구의 일방적 요구는 2015년 4월 체결한 시와 자치구 간 인사 교류 협약에 위배된다. 최악의 경우 5개항의 협약 이행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인사 교류 중단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

시와 자치구는 2015년 5월27일 인사교류 협약을 통해 ▲3급 부구청장 교류 및 자치구별 상·하반기 5급 사무관 윤번제 시(市) 전입 ▲시 결원 발생시 자치구 7급 이하 전입 ▲희소 직렬(사서직) 통합 인사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 시에서 일괄 시행 ▲신규 임용 합격자 기본교육비 지원 등에 합의했다.

박 부시장은 "지난 5년 간 각 구별로 70명 안팎, 모두 370여 명을 시로 받아 들였는데 이번에 자치구에서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권 침해', '갑질 행정' 운운하며 자체 승진을 강행하는 것은 상생의 원칙에 어긋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법과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시는 다만 공직사회 동요와 선거업무 등을 감안해 내년 6·13 지방선거 이후 민선 7기 새 집행부가 출범하면 인사교류안에 대해 세부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황봉주 자치행정국장은 "시나 구나 인사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후 민선 7기가 출범하면 전향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중 5개 자치구의 최종 입장을 수렴한 뒤 늦어도 이번주 안으로 직급별, 직렬별 인사 규모와 시기 등을 사전예고할 방침이다.

시는 부단체장의 임기가 남아 있는 남구를 제외한 4개 구 가운데 서구, 북구는 협약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동구와 광산구는 자체 인사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고 막판 조율 작업을 거치고 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여전히 현행 법 조항과 4급 과원 등을 이유로 시의 대승적인 자세를 주문하고 있다.

특히, 부단체장 자체 승진을 두고는 '부시장, 부군수, 자치구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된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을 내세워"시가 3급 부구청장을 내려보내는 관행은 구청장 임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문화수도 관련 등 4급 한시직제가 폐지되면서 서기관 티오(TO)가 추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시가 상대적으로 인사요인이 많은 만큼 시에서 받아들여줄 것"을 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훌쩍 지나 자치구의 역량도 그만큼 커졌고, 분위기도 충분히 성숙해졌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그러나 이같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인사 갈등을 두고 선거를 목전에 둔 자치구의 '내 사람 심기'라는 지적과 장기적으로 개선돼야 할, 광역단체의 '수직적 교류 관행'이라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 벼랑 끝에 놓인 인사교류 갈등이 어떻게 풀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은홍 기자

메주 작업하는 강진 주민

성탄절인 25일 강진군 군동면 전통된장마을 발효실에서 주민들이 메주를 짚으로 묶고 있다.

전남 여성 근로자, 전용 공간 부족하고 대중교통 이용 불편

전남여성플라자, 산업 · 농공단지 근로환경 실태조사

전남지역 산업·농공단지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들은 여성 전용공간 부족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여성플라자는 26일 전남지역 산업농공단지 여성 근로자 및 대표·관리자를 대상으로 여성근로자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 그 연구 결과를 담은 '전남 산업·농공단지 여성근로자 근로환경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남 산업·농공단지 여성 근로자는 유해물질·소음·환기 등 작업환경 만족도가 낮고, 작업장 내 시설 개선 요구가 높았다.

준공 10여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된 기업이 많은 전남 산업·농공단지는 여성 근로자들이 남녀 공용 화장실 및 휴게실 사용으로 인한 불편과 여성 근로자만을 위한 공간 부족 및 부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시설 미비, 간단한 진료가 가능한 보건시설 부재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통근차량이 필요하나 근로자가 50명 이하인 영세 사업체가 98% 이상 입주한 산업농공단지의 특성상 통근차량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근차량이 있더라도 어린 자녀의 통원 시간과 출퇴근 시간이 겹쳐 통근차량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맞벌이 부부는 단지 내 육아시설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여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가로등·CCTV 등 시설도 미흡했고, 산업·농공단지 주변 매점·은행·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대표 및 관리자도 단지 내 편의시설 도입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책수요 욕구를 복수형으로 응답토록 실시한 조사에서는 화장실·휴게실 등 사업장 내 시설 개선 지원, 휴게실·보건소 등 여성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남녀 임금 차이 해소 등이 많았다.

김미숙 전남여성플라자 연구원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여성 친화적 환경 개선 사업 규모를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 친화적 근로환경 개선은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이자, 복지 향상"이라고 말했다.

연구보고서는 전남여성플라자 누리집(https://www.jwomen.or.kr/) 자료실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남규 기자